

# 전남 어업인 고령화 심각

수협 조합원 10명 중 7명 60세 이상·70세 이상은 36.8%... 제주 이어 두번째로 높아

전남지역 수협조합원 중 63.9%가 60세 이상으로, 전남 어업인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70세 이상 조합원 비율도 36.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고령화에 맞는 어업환경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 조합 연령별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조합원 15만8760명 가운데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10만358명(63.2%)이었다.

전남은 조합원 5만276명 중 63.9%인 3만2147명이 60세 이상이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인 어민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71.2%로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67.8%), 부산(66.5%), 전남·경남(62.4%), 강원(61.8%), 충남(61.7%)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은 70대 이상 조합원 숫자가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남은 70대 이상 조합원이 1만8521명으로 36.8%를 차지했고, 제주를 제외한 1만453명 중 6760명인 46.5%가 70세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어촌은 물론 어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 수협 회원조합 고령조합원 현황

지역	조합원수(명)	60세 이상 조합원수		70세 이상 조합원수	
		(명)	비율(%)	(명)	비율(%)
제주	14,523	10,344	71.2	6,760	46.5
경북	8,753	5,935	67.8	9,653	32.1
부산	4,762	3,168	66.5	1,551	32.6
전남	50,276	32,147	63.9	18,521	36.8
경남	30,759	19,218	62.4	2,808	31.4
강원	5,621	3,474	61.8	1,570	27.9
충남	20,377	12,586	61.7	6,506	31.9
경인	11,287	6,741	59.7	3,610	32.0
전북	12,269	6,687	54.5	3,083	25.1
서울	133	58	43.6	13	9.8
합계	158,760	100,358	63.2	54,075	34.1

한편, 전국의 수협 회원조합 91개 가운데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도 78곳(85.7%)에 달했다.

위성곤 의원은 “수협의 고령 조합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어업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고령화에 맞는 어업환경 개선과 함께 귀어·귀촌 사업 추진, 여성과 청년 어업인 육성 등 젊은 어업 인력을 수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수산정책 자금 부당수령 급증

2014년 6건...올 8월까지 70건 79억4300만원  
‘2014년 0건’ 전남 32건 22억6400만원 최저

어촌 발전과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수산정책 자금의 부당수령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 지역의 부당 수령 사례가 지난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건, 1억 5500만원에 불과하던 부당수령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70건, 79억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건 2억56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4배, 금액은 2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는 8월까지 조사된 것이어서 앞으로 부당 수령 사례

가 더 늘어날 경우 건수와 액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2건, 22억64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건수로는 경남이 15건(16억1200만원)으로 많았고, 금액으로는 제주가 17억4000만원(2건)이었다.

전남의 경우 2014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15년 1건(4300만원) 이후 2016년 10건(8억64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올해는 3배 이상 늘어났다.

수산정책자금은 수산업법 86조 1항에 따라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융자되는 자금 등을 말한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할 수산정책자금이 부당수령으로 정작 필요로 하는 어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한 것은 해수부의 관리 부실이 크다”면서 “해수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함께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공항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해야”

무안공항 27억·여수공항 12억...“공항 공익성 무시” 지적

만성적이라 시달리는 지방공항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공항에 정부가 매년 수십억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기준 지방공항 적자규모는 무안공항 124억원에 최고로 여수공항 122억원, 양양공항 96억원 등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전국 10개 지방공항 중 5개 공항에 올해 49억4000만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무안공항 27억원, 여수공항 12억원, 양양공항 8억원 등이다. /박지경기자jpark@

# LH, 주택 매입 임대 사업 ‘전남 홀대’

8월까지 7만7180호 매입 실적 중 전남 124호 그쳐 매입률 0.16%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시 을) 의원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남지역만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까지 지 주택 7만7180호를 매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의 매입 실적은 124호에 그쳤다. 이는 전국 주택 매입률의 0.16% 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반면, 전체 매입 임대대의 49.6%인 3만

8328호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추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지방의 주거개선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역의 매입임대 사업과 비교할 때도 전남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이 4240호, 경북 2914호, 강원 2211호, 전북 3354호, 충북 2191호, 충남 1149호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이다. 심지어 906호를 매입한 제주도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이다.

이에 주 의원은 “전남의 매입임대가 전

체의 0.16%인 124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예 사업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이고, 전남의 홀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만 임대주택을 매입한 결과 경제사정이 열악한 지방이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인구수와 사업의 편의성만 생각해 매입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고리 5·6호기 운명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조사 시민 참여단의 설문조사가 완료됐다. 15일 충남 천안의 개성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마친 시민 참여단이 박수를 치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증거 인멸 우려” 박근혜 구속 연장... 내년 4월 16일까지

법원이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가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재판부가 새로 발부한 구속 영장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즉 내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된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마냥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

## 팻섬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번지, 무인도 임 14,010평/보전관리, 목포에서 50분 항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투자가치 최고 매14억, 현금2억+기타부동산과 교환가능  
주식 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집, 삼거리 코너(뒷집 작업중),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중창사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앞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이,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